

성실상환 채무 특별감면·상품권 18조원 발행

신보 보유 자영업자 8800억원어치 부실채권 2021년까지 정리
구도심 상권 혁신거점 30곳 육성하고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정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

정부가 경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종합 처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베팅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지, 막대한 자금 지원이 되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는 않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경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지역 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중 4800억 원어치를 내년에 캠프에 매각하고, 4000억원 부실채는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지역 화폐 18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내년에 현재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2조원 이상씩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0%대 수수료율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밀집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혁신 거점을 내년에 13곳,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 쇼핑·커뮤니티·정년창업·지역 문화·힐링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나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빈 점포 매입비용 지원 시범사업도 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기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원씩 늘리고 내



문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연합뉴스

년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 성실 사업자의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이 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보급률을 작년 72%에서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이고 주요 상권에 공영주차장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 지원과 보호 육성의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을 추진하고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홍준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 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시·광주비엔날레재단 내년 세계수영대회 기간 평양서 비엔날레 개최 추진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북한 평양에서 비엔날레 개최를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평양에서 가장 '평화비엔날레'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북측과 협의 중이다.

재단 측은 지난달 올해 비엔날레 행사를 마치고 민간단체를 통해 북측과 협의를 추진했다.

광주시도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섰다.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 15억원을 통과시키지는 못했으나 정부는 향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특별 회계로 사업비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재단은 정상회담 답방 등 상황을 보며 공동 행사 개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부 중장기 계획안의 남북 교류 문화 사업의 일환인 평화비엔날레는 문화부에서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올릴 준비가 윤리 등 추진에 노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작품을 전시했는데 분위기가 좋았고 우리측 작품도 북한에서 전시하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재단과 함께 (공동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화기조가 형성되면 예산은 언제든지 재편성 해줄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당성 없는 감사 배경·내용·절차 ... 의혹만 키웠다"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교체 후폭풍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인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광주시의 행정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논란 끝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으나 재공모가 아닌 재평가로 큰 점수차로 떨어진 건설업체가 '해택'을 받게 됐다.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금호산업은 재평가로 차순위였던 호반건설에게 지위를 넘겨줬다. 지역건설업체를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의 경쟁에서 광주시가 호반건설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금호산업은 시 공무원이 접수되면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례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지난 11월 8일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뒤 일련의 행정절차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실시, 재평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은 지금까지 없었다.

◇시 감사 배경 불투명, 시 감사위의 이상한 개입 = 먼저 시 감사 배경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기밀서류에 해당하는 제안서 심사표가 업체에 유출됐으며, 한 인사가 정중제 행정부시장에게 이를 내밀며 재점의 부당성을 항의한 것이 감사의 시작점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정작 감사는 기밀서류의 사전 유출이 아닌 '평가 오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시 감사위는 정량평가를 한 환경생태공공원녹지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넘어서 드러난 오류를 바로잡고 재점까지 해 이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 넘겨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가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다. 제안심사위가 수용을 거부하자 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이를 연속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압박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자 이번에는 개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위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다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쳤다.

결국 시 감사위와 제안심사위의 갈등이 계속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부담을 느낀 광주도시공사가 자

진 반납을 해야만 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광주도시공사 땅장사 논란 일켜 경쟁 건설업체 노골적 지지=광주도시공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거버넌스의 결정이었다. 지역기업이 참여해 건설업체와 달리 공원 보존을 위주로 한 개발을 선보이고, 수익을 공원 조성 및 관리에 투입하는 등 불가피한 공원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앙공원 1지구 제안서를 광주도시공사가 접수하면서 갑자기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땅장사'를 한다는 여론이 지역 내에서 벌어졌다. 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 건설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공원, 일곡공원 등의 개발에 참여하려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프레임이 적용한 것이다.

중앙공원 1지구 제안서는 광주도시공사와 한양건설, 단 2곳이었다. 건설업체 역시 시행사 자격은 유지하지만 공사에 들어가면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데도 여론전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민간'만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시정사에 과거 운동권 인사들이 자주 드나들어 무슨 일이 있는가 했더니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시민 자산인 공원을 건설업체에게 내맡겨야 하는 처지에서 지역기업의 참여까지 막아 상대인 건설업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가 재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2곳을 뒤바꾼 것과 관련 다른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구시대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행태"라며 "독립기관이라는 시 감사위가 행정에 개입하려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에 자신들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종용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솔루션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본 투시도는 구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기름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중건설